

# '97. 산재예방평가 및 '98. 산업안전정책방향

김 왕 노동부 안전정책과 서기관

## I. '97년도 산업재해예방 평가

### 가.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올해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의 터널속에서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분야는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재해예방 관계자들에게 강렬한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나아가 「노력한만큼 재해는 줄어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97년도 산재예방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96. 8월에 수립되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산업안전보건선진화 3개년계획('97~'99)」이 계획수립 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진 여건하에서도 큰 차질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96. 12. 30 개정된 데 이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97. 5. 16일과 10. 16 개정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이 확대되고 의결기능이 부여되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

도가 법제화되는 등 노·사자율에 의한 재해예방기반이 조성된 것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제도(S마크)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표준안전관리비제도가 조선업에도 확대되었으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확대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가 대폭 강화되었다.

한편, 이러한 제도정비 외에 각종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였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종전의 2,000명 수준에서 4,548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산업안전공단을 통해 직무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 인증제도도 활성화하여 11월말 현재 118개(제조업 15개소, 건설업 103개소) 사업장에 대해 초일류인증을 부여하였다. 또한 핀클러치형과 같은 안전성 결여 프레스 1,457대(11월말 현재)를 교체 또는 개조지원하였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13,026개소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및 작업환경개선·방호장치 부착 등을 위해 298억원

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2,233개소에 1,250억원을 융자하였다.

아울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12회에 걸쳐 1,048개 사업장의 시범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동부장관·한국노총위원장·코오롱그룹회장을 비롯한 주요기업체 대표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안전체험현장 TV 방영 등 안전문화운동을 짜임새있게 추진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도모하였다.

## 나.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의 성공적 시행

### 1) 100일 계획수립 배경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완화 또는 혁파조치의 일환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97.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산업안전보건제도가 폐지 또는 완화되었다. 즉 안전보건관리자의 법정 의무 고용인원이 축소되고 경직허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프레스·리프트의 정기검사가 면제되고 안전보건 관계자에 대한 법정 직무교육이 면제되었으며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도 면제되었다. 이러한 규제완화조치는 획일적인 기준적용에 따른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완화조치에 편승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이식이 크게 이완되었다.

한편,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기업의 재해예방투자여력이 크게 감소하였고 인력감축 등으로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역할이 축소됨으로써 사내 안전보건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안전보건관계자

의 사기도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재해예방분위기 이완현상은 곧바로 재해자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규제완화가 시행된 5월말까지는 재해자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541명 감소되는 등 재해감소추세가 지속되었으나 6월이후 재해가 급증하여 6월에는 재해자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716명이 증가되고 7월에는 1,182명, 8월에는 941명이 각각 증가되었다.

이러한 추세변화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83년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래 14년만에 처음으로 증가추세로 반전된 것이며, 특히 '95년에는 재해율이 0.99%로 선진국 진입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율 1% 미만」을 달성하였고 '96년도에도 재해율이 0.88%를 기록하여 감소추세를 이어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노동부에서는 규제완화조치가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재해예방분위기가 이완될 경우 재해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5월부터 적극적인 산재예방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업 등 산재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사업주 간담회 개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장 등 일선 재해예방지도기관 담당책임자 회의 개최 및 안전·보건교육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 결과 8월 들어 재해증가추세가 둔화되는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8월말 재해율이 0.57%로 연말까지 0.9%가 예상되는 등 금년도 재해율 목표 0.74%는 물론이고 전년도 재해율 0.88%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었다.

### 2) 100일 계획의 추진과 성과

이에 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적극적인 산재예방분위기를 조성하고 재해발생추세를 감소세로 반

## ■ 산재발생 현황

구 분	'97. 11월말	전 년 동 기	증 감	
				증 감 율
재 해 자	63,234명	64,883명	△ 1,649명	△ 2.54
(재해율)	(0.77%)	(0.83%)	(△ 0.06%p)	△ 7.32
사 망 자	2,469명	2,407명	62명	(2.58)
(사망만인율)	(3.00)	(3.07)	(△ 0.07p)	(△ 2.28)

전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각별한 재해감소 의지와 실천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 9. 23부터 연말까지 100일 기간동안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및 산재예방전문기관 등 산재예방관련단체의 총력을 산재감소에 집중하는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100일 계획은 100일동안 재해율 0.2% 이내 달성을 목표로, 특히 노·사의 해이해진 안전보건의식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면서 건설현장 등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11월말까지 영세소규모 사업장 37,548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공단 및 산재예방전문기관이 책임전담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항만하역·운송업체 118개소 등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총 39,90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재해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빌딩·아파트현장 688개소, 도로 132개소 등 총 1,185개소에 대해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97. 11. 27~'97. 12. 9)을 실시하였으며, 건설현장 불량가설기자재 점검 및 안전수칙 위반 건설근로자 일제단속('97. 9. 22~'97. 10. 7)을 726개소에 대해 병행 실시하였고, 한국 건설현장 합동안전 패트롤반 운영으로 11월중 662개소에 대해 범위만 사실을 시정토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노·사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동부와 안전공단에서 사고발생방지를 위한 사업주 교육(6,997개소 11,263명), 미숙련 건설근로자 교육(965회 25,878명), 현장소장 및 작업반장 교육(5,582명) 등을 실시하였고,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도급순위 701위에서 1,500위에 해당하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사업주에 대한 특별안전교육(544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재해율이 9월말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되었고 감소폭이 계속 증대되어 11월말 현재 재해지수 및 재해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재해자수 및 재해율은 각각 2.54%, 7.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추세이던 사망만인율도 전년동기 대비 2.28%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금년도 재해율은 0.82%로 전망되고 있어 전년도의 0.88%에 비해 무려 0.06%p가 감소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100일 집중계획의 성공을 통해 아무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노·사·정이 재해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재해를 입는 근로자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기업의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II. '98년도 산업안전정책방향

### 가. '98년도 전망 및 과제

최근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교란에 따른 경제 위기로 국가, 기업, 가정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일 대기업들의 부도사실이 보도되고 있고,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던 금융기관들도 업무정지를 당하는 현실속에서 기업들의 자구노력은 실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에 대그룹들조차 구조조정과 감량경영을 선언하고 임금동결, 감원, 투자축소 등을 발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98년도에 기업들의 재해예방투자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사전안전지식이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잇따르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존 근로자들도 고용불안에 따른 작업분위기 이완으로 안전의식이 해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울러 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압력이 커질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약화되어 재해요인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가경제의 위기는 바로 안전·보건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해예방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재해예방정책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과 저비용 고효율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하듯이 정부도 산업안전보건제도를 합리화하고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노·사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재해감소를 통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제위기 상황에 편승한 규제에 추가완화

요구에 대하여는 단순한 행정보고 및 절차 등은 대폭 간소화하고 핵심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유지 내지 강화하여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나. '98년도 목표와 추진방침

따라서 '98년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목표는 「재해감소 중심의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감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방침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경제적 손실이 큰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주력하고 둘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수준에 따라 차등관리를 실시하며 셋째, 재해예방기관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체제를 구축하고 넷째, 안전문화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 다. 주요 정책사업

#### 1) 재해감소를 통한 경제손실 감축

지금까지 기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뒷전으로 밀리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볼 때 안전에 대한 투자만큼 좋은 방법도 없을 것이다. '96년도의 경제적 손실액은 6조7천8백억원으로서 이는 전국의 사업장 모두가 3,200만원씩 손실을 입은 것이다. 특히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30,610개소에 불과하므로 재해발생 사업장은 2억2천만원 이상 경제손실을 입은 것이다. 한편, 재해발생원인 중 교육적인 원인이 41.19%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거

창한 기업구조개선에 앞서 안전교육만 제대로 실시해도 연간 1억원 정도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재해를 감소목표관리에만 치중하였으나 '98년부터는 재해율은 물론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및 경제손실 감소목표도 설정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각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공단 지도원 및 산재예방전문기관별로 재해율, 사망만인율, 근로손실일수 등의 감소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유도·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한정된 행정력을 가지고 효율적인 재해예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잘해 나가는 사업장은 지도·감독을 배제하고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야 할 것이므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여부도 당해 사업장의 규모·업종 및 안전보건관리수준(재해율, 근로손실일수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즉,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수준이 상위 20% 이내인 사업장은 지도·감독을 배제하고 노·사가 자율관리하도록 하며, 20~50%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자체산재감소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도·감독을 유보하되 동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50% 미만인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 지도원에서 정기방문지도 등 책임전담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위험이 큰 사업장은 산업안전공단의 조선업위험관리팀 및 화학공장위험관리실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도·감독보다는 기

술 및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어 안전·보건상태를 개선함과 아울러 경쟁력 회복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공단, 대행기관 및 기술지도기관 등 산재예방전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 2) 산재다발 생산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최근에는 ISO 인증, CE 마크 등 국제적으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97. 9부터 기계·기구 안전인증제(S마크)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내년에는 인증처리건수를 최대한 늘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S마크만 획득하면 수출대상국의 안전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확대하기 위해 '98. 3월중에 국제방폭전기기기 상호인증협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프레스,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로부터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험기계·기구 제조자로 하여금 설계·제작단계에서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제조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피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제조책임제도」 도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또는 가칭 「기계·기구안전제조법」의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1968년부터 「기계장비안전법」을 제정·시행중이다.

## 3) 건설재해예방의 강화

건설업의 경우 공사의 대형화·고층화에 따라 위험요인이 다양해지고 재해강도가 높아지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대형재해가 우려되는 취약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즉 지하철, 고속철도, 신공항, 항만, 댐 등 SOC 건설현장(340여개소)에 대해 등급관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가 「양호」한 현장은 자율관리에 맡기고 「보통」인 현장은 산업안전공단에서 안전기술정보 제공 등 지원을 실시하며, 「불량」한 현장은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스스로의 안전관리노력을 고취하기 위해 도급순위 700대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조사·발표하고 재해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가·감점(±5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가설기자재의 검정대상 품목을 현행 24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고 업체자유규제를 적극 유도할 것이며, 지보공·작업발판 등 가시설 안전작업모델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3대 취약시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현장에 대해서는 추락, 낙하, 붕괴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합동안전패트롤」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점검시에는 안전모 착용 등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도 함께 단속하여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 4)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취약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룹별·업종별 작업환경평가·비교를 통해 자율개선의지 고양에 힘쓸 것이다. 즉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약 1,000개

소)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반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환경불량 사업장(약 1,000개소)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산업안전공단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작업환경취약사업장에 대한 차등관리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그룹별·업종별로 유해물질의 측정결과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직업병예방사업은 신종직업병 예방 및 조기발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즉 직업성 요통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지도하고, 최근 사회문제화된 바 있는 망간취급 건설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해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집중실시하도록 하며, 석면취급 근로자의 석면폐암·중피종·석면진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을 통해 석면 수입업체 명단을 확인하여 미허가사업장을 색출하고 석면작업 「근로자화학물질정보수첩(CIS)」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증진운동(THP)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시행요령을 제정하고 건강증진운동을 양성하여 건강증진운동 추진기법을 교육함은 물론 사업장에 관련자료를 적극 보급해 나갈 것이다.

#### 5)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민간역할 제고

안전이 반드시 대규모 시설투자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각자가 스스로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안전의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도 역

시 지금까지 추진해온 안전문화운동이 범정부적·범국민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계획이다. 먼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행사위주에서 점검위주로 전환하고 4월 둘째주 월요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안전문화 열린음악회 등 안전문화 종합행사를 개최하고 TV 및 라디오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가 국민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재해가 빈발하는 신규입사자를 중심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입사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필증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해다발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집 또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사고재발방지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법정의무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의 교육프로그램을 전문화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아갈 계획이다.

#### 6)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과학화

산업재해예방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산재통계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센서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원인 분석이 구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통계 산출방법 및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인 이상 전업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실태 센서스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 위험기계·기구보유, 유해물질 취급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정확한 실태파악에 입각한 과학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련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산업안전공단의 정보네트워크(KISCO NET)를 확대하고 노동부·산업안전공단·산재예방전문기관간에 「재해예방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 및 검진기관(측정기관)간에 근로자 건강관련 정보 및 작업환경 측정결과 자료 등을 교류하기 위한 산업보건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Ⅲ. 결론

#### (산업재해예방으로 국가경쟁력 회복 추진)

산업재해는 귀중한 생명을 빼앗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힌다. '96년도에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6조7천7백억원으로 경상 GNP의 1.8%를 차지하였고 금년에는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도 정부재정 절감목표액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이다. IMF 자금지원시대를 맞아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산업재해의 증가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내년도 전망을 통해 조망한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안전의식이 해이해지고 투자가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재해가 증가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노와 사가 힘을 합쳐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

산업안전에는 노와 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기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근로자는 기업의 안전을 지켜주는 협력적인 재해예방이 산업재해감소를 통한 기업경쟁력 회복의 지름길인 것이다. 작은 관심으로 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노·사·정 모두가 안전맨이 되어야 할 때이다.